

“인재개발원 기능 축소 바람직하지 않아”

김부겸 행안부장관, ‘지방공무원 자체교육 필미 제공’ 행안부 지침 논란 관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지방공무원 5급(사무관) 승진자 교육을 도맡아온 지방자치단체개발원의 기능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행안부에 5급 승진자를 자체교육하는 방안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사실상 불가 의사를 밝힌 셈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별관 인근 나라꽃동산에서 기념식수 행사 후 기자와 만나 “우리(행안부)가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긴 하나 경기도에 양보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방체가) 각자 (자체

교육을) 하겠다고 들면 인재개발원의 기능이 많이 축소될 텐데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각 지역에서 온 사무관급 간부끼리 네트워크를 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최근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인재개발원으로 5급 승진 후보자를 교육 보내면 교육 시기가 지연돼 인사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행안부에 자체교육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행안부가 지난해 11월 각 광역 지자체에 보낸 ‘2019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 지침에서 촉발됐



다는 논란이 일었다.

지침에는 ‘시·도지사가 자체교육 실시를 요청하면 적정성 검토 후 승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상 5급 승진 후보자의 교육훈련을 행안부 산하 인재개발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고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행안부의 지침이 현행법에 근거한 데다 원정교육을 기피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을 반영한 것일 수 있지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인재개발원의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전북도는 최근 5급 승진자 교육을 인재개발원이 전담하도록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개정해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한 상태다.

김 장관은 이날 행안부의 세종시대 개막을 기념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열망하기 위해 소나무를 심는 행사에 참여했다. 기념 식수목은 16년생 정이품송(천연기념물 제103호)의 후계목이다. /김진성 기자

4·3 보선 ‘무승부’ 여야 대치 ‘팽팽’ 예고

‘단일화’ 정의당, 창원·성산 한국당, 통영·고성 수성 민주당, PK 민심 위기론 실감 정의·평화 공동교섭 교두보 마련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1대 1 무승부로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의 대치 정국은 더욱 팽팽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첫 선거를 치른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보수 텃밭인 통영·고성을 무난히 가져감은 물론, 창원성산에서의 선전으로 당 지지율 상승세에 모멘텀을 얻게 돼 향후 강력한 대야투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남 창원 성산에서 후보 단일화를 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당선되면서 최악을 면했지만 낙승을 점쳤던 당초 예상과 달리 박빙 끝에 신승을 거두며 부산경남(PK) 민심 위기론을 제기하게 됐다.

4일 0시 현재 개표가 완료된 창원성산에서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이룬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45.75%의 득표율을 얻어 45.21%를 기록한 한국당 강기훈 후보에 0.54%포인트차 신승을 거뒀다.

개표율이 90.39%를 기록 중인 통영·고성에서는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59.54%의 득표율을 기록해 36.02%에 그치고 있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 당선이 유력하다.

이번 보궐선거는 단 2곳에서, 그것도 남은 임기가 1년 밖에 안되는 국회의원을 뽑는 ‘미니 선거’였지만 내



노회찬 묘소 찾은 여영국 의원

4.3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4일 경기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 노회찬 전 대표의 묘소를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년 4월 총선을 앞둔 마지막 선거여서 민심의 풍향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았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정국이 급랭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치 1번지’ 창원 성산과 ‘보수 텃밭’ 통영·고성에서 여야가 1석씩 나눠가짐에 따라 양보 없는 대치 정국이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권심판론’을 이번 선거의 핵심 구호로 내세웠던 한국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반면 가뜰이나 ‘인사 실책’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은 무승부라는 결과

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하다. 집권당으로서의 이례적으로 보수 정당에 양보한 후보 단일화의 승부수를 던졌음에도 하미터면 한국당에 창원 성산을 내줄 뻔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나머지 통영·고성 뿐만 아니라 기초의원 3곳(전북 전주시 라, 경북 문경시 나·리)에서도 모두 패했다. 사실상 민주당은 건진 게 아무 것도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선거를 통해 다음 총선에 대비한 동진(東進) 정책을 펼치려 했던 민주당은 경고등이 켜진 PK 민심을 뚜렷이 확인하고 고민이 깊어질 것

로 보인다.

물론 민주당이 얻은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의당이 의석수 1석을 확보함에 따라 민주당회당과 공동교섭단체를 다시 이룰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만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성사된다면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항할 든든한 우군을 얻게 되는 셈이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간 공조 체제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뉴시스

전주시, 커뮤니티케어 최종 확정

김광수 의원, 국비 7억 확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4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전주시가 최종적으로 선정 돼 국비 7억 원을 확보했다”며 “전북대 약대 유치에 이어 커뮤니티케어사업까지,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북도민들을 위해 묵묵히 달려온 것들이 하나둘씩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 매우 뿌듯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총 63억9,300만 원(8개 지자체 사업분)의 규모로서 지난 1월 10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4월 초에 최종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었다.

총 63억 9,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경쟁률도 8개 선정에 총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해 3.61:1의 경쟁률을 기록, 각 지역의 자존심 대결도 함께 펼쳐지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



원으로서 이번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보건, 복지, 돌봄,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 전문가가 협력하여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형을 만드는 것이 이번 선도사업의 주된 목적이라 평가 핵심임을 파악하고, 복지부에 전주시 노인 돌봄 관련 민간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등 이번 사업 선정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전주시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장애인 돌봄 확대, 응급 간병비 지원, 우리집 응급 돌봄비 파견, 편안한 병원 동행, 전주형 케어인심 주택, 건강관 질병예방 사업, 스마트 돌봄 플랫폼 사업 등 전북의 어르신 관련 케어 인프라 확대도 가능해진다. /김진성 기자

안호영 의원, 8일부터 완진무장 지역과 예산정책 협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완진무장 지역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추진을 위한 행보에 가속도를 붙인다.

4일 안호영 의원은 이날 8일부터 완주군과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을 잇달아 방문해 예산정책 협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정책 협의에서는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방안과 지역별 주요 현안추진, 민원해결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2019년 국가예산으로 완진무장



에 7,786억원을 확보한 만큼,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국가예산과 관련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지를 숙의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8일 완주군을 시작으로, 9일 진안군, 10일 무주군, 11일 장수군 등의 일정의 예산정책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우간다와 우호교류 활성화

도의회-우간다 테소국회의원회, 교류의향서 체결

전북도의회는 4일 우간다 테소국회의원회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송지용 부의장과 패트릭 오카베 의장은 이날 우호교류의향서에 서명하고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와 기술·교육·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관계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도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식에는 송지용 부의장 등 도의회 관계자와 패트릭 오카베 테소국회의원회 의장과 의원, 이영길 테소 쿠미대학 총장 등 테소지역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체결식에서 송지용 부의장은 “아프리카 지역인 우간다의 테소국회의원회와 우호교류를 체결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 지역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패트릭 오카베 의장은 “지난해 12월 전북도의회를 방문해 교류의 물꼬를 튼 것을 계기로 우호교류의향서 체결이 이뤄졌다”며, “테소국회의원회도 양 의회의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